



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

2016. 10. 10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9월의 금융개혁	1
①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	
② 금융권 공동 '금융개혁! 창업·일자리 박람회'	
③ 서민금융진흥원 출범	
④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경감방안	
⑤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 추진	
⑥ 보험사기 다잡아 오픈 등 보험사기특별법 시행	
⑦ 상장·공모제도 개편방안	
⑧ 제2차 국민채감 20大 금융관행 개혁	
II. 10월의 금융개혁	7
① 「현장」 중심 금융개혁 운영체계 강화	
② 금융개혁 서베이 및 FGI 결과	
③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	
④ 기술금융안착을 위한 제도보완방안	
⑤ 클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	
⑥ 금융 자율규제 개혁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	
⑦ 금융개혁 입법 추진	
III. 기타 주요현안	17
① 가계부채 관리강화	
② 한미약품,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	
③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정착	
④ 우리은행 민영화	

I. 9월의 금융개혁

① 신용평가 신뢰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(9.21일)

- ❶ (시장평판에 의한 규율) 비교·공시 강화, 신평사 역량평가, 기업의 자체신용도 공개* 등 → 신평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
- * ('17~) 민간금융회사·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하는 일반기업, ('18~) 일반기업
- ❷ (신평사 독립성) 제3자 의뢰 평가 허용, 신평사 선정 신청제, 펀드신용평가 도입 등 평가기반 확대 → 발행자 영향력 축소
- ❸ (부실평가 방지)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검사·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 제고 → 부실평가 예방

➡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제고하고, 정확한 평가정보가 사전에 적기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
※ <참고 : 신규 신평사 진입> :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·관행을 개선하고, 「시장평가위원회」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 결정 (공정화·금융회·금융개혁추진위 등의 종합의견)

② 금융권 공동 '금융개혁! 창업·일자리 박람회'(9.21일)

- ❶ (행사 개요) 9월 21일(수), '금융개혁! 창업·일자리 박람회' 진행
 - 261개(현장참가 161개, 간접참가 100개) 기업 참가, 5,200여명 구직자 방문
 - 구직자 860여명이 1차 합격 → 기업별로 추후 최종 면접 등의 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 선정 예정
 - ❷ (후속조치) 참가기업들은 인터넷*을 통해 추가채용 진행
 - * 박람회 인터넷(www.startupnjob.com)
 - 기업은행은 금년말까지 참가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매칭할 수 있도록 헤드헌팅 서비스 제공
 - * 청년희망재단에서는 금번 박람회 참가자 중 신청자에게 면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장대여비, 차비(지방), 숙박비(지방)등도 지원
- ➡ 금융개혁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

③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(9.23일)

- '16.9.23일 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 시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설립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연내 33개소 구축)를 통해 진흥원, 신복위, 캠프 등 유관기관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
- 향후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❶ 지원대상 선정, ❷ 상품개발, ❸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

- * ① 서민의 재기의지 파악을 위한 새로운 정보 발굴·종합,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
- ② 수요자 위주 상품 공급을 위해 브랜드 통일, 특성·자금용도별 상품 구성
-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·복지*센터의 연계 강화를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

➡ 서민금융지원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항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④ 서민·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방안 (9.26일)

- ❶ (채무조정) 중도탈락자(신복위), 취약계층(국민행복기금)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- * ① (성실상환자 인센티브)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,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
- ② (취약계층 지원) 행복기금 상환능력 결여 장기연체자(15년 이상) 원금감면 확대(최대 90%)
- ③ (행복기금 운영 개선) 행복기금 주채무자 상환 완료시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 적용

- ❷ (채권추심) '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' 시행 등 추심행위·위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추심관행 유도

- * ① (채권추심 규율 강화)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, 불법채권추심 감독 강화
- ② (채무자 권리보호)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, 채무자 교육·홍보 강화
- ③ (가계 부실채권 매각·매입 개선) 금융권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

➡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서민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하고 자활·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

참고

서민·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방안의 취지

- 「서민·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」은 건전한 신용질서와
틀을 유지하면서도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것
-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성실히 상환할
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중점
 - * ① 채무조정 후 60% 이상 상환자에 미소드림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
 - ② 채무조정 후 75% 이상 상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 어려우면 잔여채무 면제
 - ③ 신복위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 완화(연체금액의 1/3→분할상환금 1회차)
- 또한 생활 안정을 통해 성실상환자나 취약계층이 자활·재기에
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제도도 마련
 - * 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카드 한도 확대(월 50만원 → 월 100만원)
 - ②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 할부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 지원
- 금번 방안은 일반적인 금융 채무의 일괄적인 감면을 확대
(탕감)방안이 아님
 - 원금감면을 확대는 전체 금융회사 보유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
기금이 매입·관리하는 채권(281만명 연체채권)에 한정적으로 실시
 - 또한, 금번 방안은 단순한 감면을 확대가 아니라 상환의지가 있지만
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재기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지원
 - *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(15년이상, 약10만명 추정)를 대상으로 최대
90%까지 감면토록 함으로써,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경제적
자활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
-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완장치 마련
 -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
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며,
 - 전문가로 구성되는 '채무조정위원회(기금내 설치)'의 심의를
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'최대' 90%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정

⑤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 추진 (9.30일)

※ '찾아가는 금융신문고'를 통해 5개 지역 현장을 방문(대전, 강원, 부산, 광주, 대구, 3.9~9.6)하고, 지역금융전문가 TF(13人)를 통해 발전전략 마련

- ① (지역산업·기업지원) 지역 산업·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와
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간자본 역할 강화
 - * ①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거점으로 육성 ②농어업 관련 자본·기술
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-투자-보증 연계 자금지원 활성화 등
 - ② (지역금융산업 활성화) 지역금융의 상품 판매범위 확대(단위농협
펀드판매 등) 및 지역 금융인 교육을 통한 지역 자산관리인력 육성
 - ③ (지역 취약계층 지원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, 취약계층
채무구제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
 - ④ (금융개혁 지역 전파 및 소통 강화) 지역금융협의회* 구축 및
지역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지역으로 지속 확산
 - * 정책금융기관, 업권별 협회, 지방은행 협의회 등으로 구성
- ➡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금융개혁의 지역확산에 기여 기대

⑥ 보험사기 다잡아 오픈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

* '보험사기방지 특별법' 시행(9.30일), '보험사기 다잡아' 오픈(10.4일)

- ① (보험사기에 대한 벌칙 강화)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이 강화
(2천만원 이하→5천만원 이하)된 보험사기죄 신설
 - ② (소비자보호 강화) 보험금 지급 지체·거절·삭감을 엄정 제재
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
 - ※ 보험금 지급 지체·거절·삭감을 원칙금지하고, 위반시 건당 최고 1천만원 과태료
 - ③ (인프라 구축) 다수·고액보험 가입을 차단하고, 허위·반복
청구 의심건 적출이 가능한 「보험사기 다잡아」가동(10.4일)
 - ※ 기존에 생·손보험회, 공제(보험개발원)에 흩어져 있던 보험 가입,
보험금 청구/지급 정보를 원스톱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
- ➡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
부담 인상을 통해 메꾸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기대

7 상장·공모제도 개편방안 (10.5일 개혁추진위 논의, 10.6일 보도)

< 주요내용 >

- **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**

1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

*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편

2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·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

*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높은 기업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특례상장 제도 신설
* 수요예측 제도 외에 경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모가 산정방식을 허용하고, 수요예측 참여 범위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

3 무분별한 상장·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

*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추천하거나, 보다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
* 주관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

< 주요 의의 >

- **상장·공모시장 운영방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데 의의**

1 상장·공모시 기존의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합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

2 일반기업이 이익미실현 상태에 있더라도 성장성을 인정·평가 받는 경우 상장을 통해 장래 이익 실현의 발판 제공(Tesla 요건)

* 생산설비 확충 등으로 이익미실현 상태에 있더라도 사업의 성장을 통해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에게는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 기회를 제공

3 주관사가 주도적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중개·주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대폭 확대

* 가격산정, 물량배정, 상장추천 등에 있어 상장주관사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 하되, 풋백옵션 등을 통해 결과에 책임을 지는 운영 방식을 추가

8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(10.5일 개혁추진위 등)

- '16.3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

-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해왔으며 9~10월 중 8개 방안을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20대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완료

- 발표한 방안들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하여 금융현장에 안착해 나갈 예정

<9~10월중 확정되어 추진중인 20대 금융관행 개혁방안>

- 9.1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가동(Financial Information Network)
→ 금융상품, 금융피해 예방, 서민중기 지원 등 9개분야 31개 정보서비스 제공
-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 강화 및 장애인 복지카드의 장애인 증명서류 인정 등 가입 절차 간소화(9.6일 발표)
- ATM 화면(마감 3분전부터), 음성안내(마감 10분전부터)를 이용하여 ATM 마감시간 안내 강화(9.7일 발표)
- 금융회사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,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,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대출채권 매각관행 등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(9.20일 발표)
- 투자자경보제도(investor alert)로서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(cybercop.fss.or.kr)에 투자자경보 게시판 개설(9.21일 발표)
→ 고질적·반복적 위반유형 및 투자자유 의사항 게시 추진
- 상호금융권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캠페인 전개 및 환급 절차 정비 추진(9.26일 발표)
-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 도입(10.4일 발표)
- 연체이자 기산일 산정, 연체정보 집중, 신용카드 연체발생시 통보 시기 등의 관행 개선(10.10일 발표)

- ➡ 금융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를 개선하는 한편,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

II. 10월의 금융개혁

1 「현장」 중심 금융개혁 운영체계 강화

□ (현황) 이번 금융개혁은 '현장의 목소리'를 바탕으로 '시급하고 실천적'인 개혁과제를 선정,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

- ① (현장지원단) 총 1,040개사 방문, 5,240건 건의(수용률 48.3%)
- ② (금융위원장 현장행보) 현장방문 143회, **金요회**(전문가간담회) 32회
* '15.3월 금융개혁 추진 이후 주당 2회의 금융위원장 현장행보 실시
- ③ (음부즈만) 업권별 음부즈만(총 7인) 운영
- ④ (對국민 서베이 및 FGI) 서베이(연 2회), FGI(연 1회) 실시

□ (향후계획) 기업구조조정, 가계부채 대응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「현장」 중심의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
○ 신규과제 발굴 및 금융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소통 대폭 강화 → 금융개혁의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

- ✓ (신규 과제 발굴)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중소·벤처, 금융소비자, 지역금융 등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에게 직결되는 신규과제 발굴
- ✓ (사후 점검) 재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'과제이행'보다는 금융현장에서의 '실제변화' 점검
- ✓ (이해 관계자 설명) 정책 발표시 이해 관계자 현장 설명 → 정책 수용성 제고

- ① (현장지원단)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운영, 지역별/업권별 점검과 함께 P2P대출, 저축은행, 사잇돌 대출 등 테마점검 지속 추진
- ② (현장행보 강화) 매주 위원장 현장방문 1회 이상, **金요회** 1회 원칙 - 금융위 소 간부가 현장행보를 통해 금융개혁 안착 및 신규과제 발굴
- ③ (실태평가) 외부 전문가를 통해 2개월간(9.28~11.27) 금융규제 운영 실태평가 실시 → 연내 점검결과 공개
- ④ (대국민 서베이) '15년 2회 → '16.8월 → (예정)'16.12월
- ⑤ (음부즈만 활동) '16년 음부즈만 활동보고서 공개('17년 3월내)

※ ③, ⑤는 금융규제운영규정(총리훈령)에 따라 최초 실시

2 금융개혁 서베이 및 FGI(Focusing Group Interview) 결과 (10.5일 개혁추진위 논의, 10월중 순차적으로 보도)

< 진행경과(9월말) >

□ (대국민 서베이) 금융개혁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해 서베이
→ '15.12월 서베이에 비해 일반인·전문가 모두 평가가 개선

※ 일반국민(300명)·전문가집단(100명)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(갤럽, '16.8)

○ 특히, 일반인의 인지도 및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

* 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 : ('15.12) 일반인 68.7%, 전문가 94.8%
('16.8) 일반인 97.4%, 전문가 100%

*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(5점 척도)

	'15.6 서베이	'15.12 서베이(B)	'16.6 서베이(A)	증감(A-B)
일반인	-	2.67	3.01	+0.34
전문가	4.12	4.19	4.35	+0.16

○ 또한, 일반인(3.08점, 보통 이상)·전문가(3.91점, 보통 이상) 모두
“금융개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” 평가

□ (FGI) 기술금융, 핀테크, 검사·제재개혁에 대해 각각 FGI 실시

- ① 기술금융 : 설문조사(중기CEO 400명, 은행지점장 2,591명)
심층면접(중기 CEO 7인, 지점장 6인, 관련전문가 13인)
- ② 핀테크 : 심층면접(핀테크 기업(5명), 금융회사·유관기관(6명), 전문가(5명))
- ③ 검사·제재개혁 : 심층면접(수검기관(내국계 10명, 외국계 4명), 금감원 검사역(6명))

○ 개혁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과 함께 취지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반면, 과제별로 일부 보완 필요사항*도 제기

* 예 : 기술금융(TCB평가 모형 개선), 핀테크(해외진출로드맵 마련),
검사·제재(차질없는 법령 개정) 등

< 평가 및 향후계획 >

□ 금융개혁이 금융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며, 실생활에서도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차 체감하는 것으로 평가

□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조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안착 지속

※ 10월중 대국민 서베이(10.10일) 및 FGI 결과(3건)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 예정

③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

<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>

- (추진배경) '12년 이후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과열되었던 파생상품시장은 안정화*되는 모습
 - *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(단위 : 조원) : ('05) 18.3 → ('11) 66.3 → ('16.上) 41.9
- 다만, 글로벌 시장에 비해 상품 다양성이 부족*하고 경직적인 진입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
 - * 장내 파생상품 수('15말, 개) : 한국 31, 미국 1,441 유럽 586, 일본 72 등
- (추진방향) '96년 설립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
 - 투자자 보호원칙을 전지하면서 투자자의 위험관리 성향과 방식에 맞게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
 -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상품 개발을 촉진(예 : ETF 선물 등) 하는 한편 ETN 활성화 등 추진

<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>

- (추진배경) ELS 발행잔액이 급증*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**와 증권사 건전성 및 시장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이 부각
 - * ELS 발행잔액(조원) : ('10년말) 22.3 → ('16.8말) 101.4
 - ** 고령투자자 등 안정성향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투자
- (추진방향) ELS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
 - ELS 등 고위험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(예 :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등) 강화
 - 증권사 건전성 및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, 투명한 운영자금 관리 체계 마련

⇒ 10월 ~ 11월중 방안 발표

④ 기술금융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 (11.3일 개혁추진위 상정 예정)

< 진행경과(9월말) >

- '14.7월 시작된 기술금융은 빠르게 정착·안정화 단계에 진입
 - * ① '16.8말, 기술금융 대출 50.2조원 공급 →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안착
 - ② '16.8말, 기술금융 투자 4,747억원 집행 → '15년말 2,599억원 대비 큰 폭 증가
 - ③ 8개 은행이 자체 기술금융 실시(하반기) → 약 1.5조원 자체 기술금융 공급 기대
- 설문 조사('16.8.) 결과, 기술금융은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유지
 - * “다시 이용하고 싶다” : 89.3%, “주변에 추천하겠다” 70.8%

< 향후 계획 >

- 기술금융이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「기술금융 제도 보완방안」 추진 → 금융개혁추진위(11.3) 상정
 - ※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(FGI) 등을 통한 점검 결과, TCB의 복잡한 평가절차, 평가 수요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

(검토안 예시)

- ① (TECH 평가 합리화) 은행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TECH 평가가 공정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개선
 - * 초소액·초단기 기술금융 대출 방지, 은행간 공정경쟁 유도 등
- ② (TCB) 기술금융 근간이 되는 TCB평가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절차 개선, TCB 평가 수요 확대 등을 중점 추진
 - * i) TCB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유의성 검증 등을 통해 TCB평가서 세부지표 개선 등
 - ii) 제조업 중심의 평가모형 →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평가모형 고도화 추진
 - iii) 재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 등 기업 불편이 없도록 평가절차 간소화 등
 - iv) 은행 대출 → 조달청 등 정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평가수요 확대
- ③ (TDB) TDB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TDB를 기술금융 필수 인프라로 정착

⑤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(11.3일 개혁추진위 상정 예정)

< 진행경과(9월말) >

- (펀딩 현황) 1.25일 출범 이후 8개월여 간 **168건의 펀딩 시도 중 80건이 성공(48%), 130억원의** 자금을 조달(건당 평균 1.7억원)
 - 총 **5,491명이** 펀딩에 참여하였고, 이 중 기업이 펀딩에 성공 (목표금액 80%이상 청약)하여 실제 투자한 투자자수는 **4,429명**
 - *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등의 비중이 95%(인원기준, 금액기준 48%)
- (중개업자) 1.25일 5개사에서 출발하여, 경험과 역량을 갖춘 증권사·종금사 등 금투업자를 포함하여 총 14개로 증가
 - * 전업중개업자 8개사, 증권사·종금사 등 겸업중개업자 6개사
- (지원제도) 성장사다리펀드·기업은행에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펀딩 단계 및 성공기업 후속 투·융자를 지원 중
 - * 성장금융 K-크라우드펀드 245억원,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100억원, IBK매칭투자조합 100억원, IBK희망펀딩대출(신·기보 공동) 1,000억원

< 향후 계획 >

- 중개업자·유관기관·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「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」 마련 → 금융개혁추진위(11.3) 상정 (검토안 예시)
 - ① 활발한 홍보를 위해 단순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규제 완화
 - ② 투자자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(KSM) 개설 및 초기거래 촉진을 위한 시장 내 전매제한 완화
 - ③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공기업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
 - ④ 청약시스템(Bankpay)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등

⑥ 금융 자율규제개혁 및 금융규제테스트 베드 도입 (11.3일 개혁추진위 상정예정)

1 추진배경

- 전년 금융규제를 4개로 유형화(건전성, 영업행위, 시장질서, 소비자 보호)하여 합리화하는 「**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**」 추진
 - 이를 통해 법규규제 및 그림자규제(행정지도 등)를 대폭 개선
 - * 법규규제 전수조사 → 1,064건 중 211건 개선
 - * 비공식 구두지도 등 행정지도 감축(700개→41개)
 -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('16.1월~), 가격에 대한 불개입 선언 등
- 법규규제 → 그림자규제 개혁에 이어 금년에는 금융규제의 최하단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과 함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(Regulatory Sandbox) 도입 추진중
 - ➔ **全 단계의 금융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의 완결 추진**

2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

< 진행경과 >

- ① 8월, 7개 업권 협회 및 거래소가 자체 「자율규제 개선방안」 검토
- ① 소관 규정을 전수조사한 후, 업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비

구분	은행	보험	금투	거래소	여신	저축	신협	계
정비대상*	56	24	36	46	37	40	9	248

* 자율규제 중 금융회사 등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비대상으로 선정

- ② 자율규제 제·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견청취 의무화, 규제심의기구 설치 및 논의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
- ② 9월, 금융위·금감원,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“자율규제개선 T/F”에서 8개 기관의 「자율규제 개선방안」 검토·보완 중
 - 특히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선 가능성 검토

< 자율규제 개선사례 유형(예시) >		
유형(예시)	주요 사례(예시)	개선방식
금융소비자 불편 해소	■자문형 랩어카운트 약정기간 최소 1년 이상 의무화	개선
금융회사 자율성 제고	■은행 손절매 대상·절차 등 일률적으로 규제	폐지/개선
규제집행력 강화 필요	■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진입규제(거래단위, 증거금)	법규화
시장질서 유지	■KORIBO, COFIX 산출, 공시 지침	법규화

< 향후계획 >

- 10월, 금융위·금감원 「**옴부즈만 회의**」 (민간 전문가 10인) 검토
→ 「**금융개혁추진위원회**」에서 「**금융권 자율규제 개선안**」 심의

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

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영업 모델의 경우 **규제요건을 한정적·한시적으로 완화***하여 시범 사업하는 “**규제 안전지대**”

*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완화된 규제 적용, 기존 인가 금융회사를 통한 테스트 수행 등
→ 英 금융영업감독청(FCA)이 도입, 시행초기인 「**Regulatory Sandbox**」의 취지와 동일

< 진행경과 >

- KDI를 통해 금년 6월~9월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핀테크 업체(170개) 설문조사 진행

※ 핀테크 업체들은 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상당한 기대** 표명

- ① 핀테크 업체가 시범테스트를 할 때 애로사항 중 금융규제 부담이 약 37%
- ② 핀테크 업체 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용에 적극적인 업체는 금융서비스 플랫폼(환전, 송금, 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종합제공), **개인자산관리** 순
- ③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시 핀테크 업체의 **후속투자 유치(80.2%)** 및 서비스 **상용화 기간 6개월 이상 단축(32%)**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
< 향후계획 >

- 용역 결과에 대해 금융·IT·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후 「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**」 마련 → 금융개혁추진위 심의
 - (1단계) **법률 제·개정없이**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여 조속 추진하는 방안 先 추진
 - (2단계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성과를 보아가며 관련 법률 정비
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실시('17년초)

참고

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해외사례

- ① (영국) 금융영업감독청(FCA)은 「**Regulatory Sandbox 도입안**」을 발표('15.11)했으며, 현재 **외부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운용 중***

* '16.5.9일부터 2달간 샌드박스 이용 신청을 받았으며, 현재 기업 선별 중

①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

- ① (금융회사) 규제 특례¹⁾ 허용, 그레이존 해소²⁾, 비조치의견서 등

- 1)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관련 규정의 적용을 면제(waiver)하거나 규정의 내용을 변경(modify)할 수 있는 법적 권한
- 2) 규제적용이 애매모호한 영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적용 여부를 회신

- ② (비금융회사)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금융업 인가

② Sandbox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① (Virtual Sandbox)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다수 회사들의 시장성 테스트 데이터를 집적·공유

- ② (Sandbox Umbrella) 인가 받은 특정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에 Sandbox 제공

- ② (호주) 증권투자위원회(ASIC*)는 핀테크 규제 개선안 발표('16.6)

*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

- ① (부분 허가) 핀테크 업체가 사업영역, 서비스 특성에 **필요한 규제만 적용**받을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**모듈화***

* 호주의 경우 서비스 유형, 고객집단 등에 따라 준수해야할 규제가 달라짐

- ② (인가기준 완화)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업 인가 기준 중 하나인 금융서비스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**완화**

- ③ (대리인 제도) 미인가 기업이 허가받은 기업의 명의로 영업

- ④ (제한적 허가 면제) 혁신성 있는 스타트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인가없이 소규모 소비자군에 6개월간 테스트 가능

7 금융개혁 입법 추진

1 은행법

- ① (주요내용) 금융시장 경쟁촉진 및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창의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
- ② (추진현황)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「은행법」 개정안 2건이 기 발의
 - * 강석진의원('16.6.16), 김용태의원(7.8) → IT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50%이내까지 허용(현 은행법은 4%까지만 보유가능)
- ③ (향후계획) 최대한 금년중 관련 입법이 통과되도록 노력

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- ① (주요내용) 뒤쳐진 한국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
- ② (추진현황)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(이진복 의원, '16.7.8.)
- ③ (향후계획)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진전 노력
 - 개정안은 19대 여야 합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 통과 기대

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- ① (주요내용) 유한회사·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, 외부감사인 독립성·책임성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개선
- ② (추진현황) 현재 정부의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진행중이며, 그 외 의원입법안*도 발의
 - * 박용진 의원('16.7.1), 김해영 의원('16.7.11), 제윤경 의원('16.9.12), 배덕광의원('16.9.20)
- ③ (향후계획) 정부안은 법제처 심의를 마치는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
 - 의원입법안과 함께 국회내 합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

4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

※ 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저축은행·여전·신탁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- ① (주요내용) 금융권의 자율성·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'개인제재'에서 '기관·금전제재'로 전환 추진

< 제재개혁 관련 개정 주요내용 >

- ① 과태료·과징금 부과한도를 주요 업권 중심으로 평균 2~3배 인상
- ② 일정기간(원칙적으로 5년)이 경과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
- ③ 금융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권법(지주·은행·보험·저축은행·대부업)에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추가 도입
- ④ 금융위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를 금감원에게 위탁(분기별 금융위 보고)

- ② (추진현황) 규개위 심사 완료 후 법제처 심사중
- ③ (향후계획) 법제처 심사 완료 후(10월 중) 금년 정기국회 제출

5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

- ① (주요내용) 금융소비 전 과정(사전 정보 제공·판매규제·사후구제)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
 - (정보 제공) 상품간 비교 공시 강화,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등
 - (판매규제) 불완전 판매 및 과잉대출 방지 사후규제 강화*
 - *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적합성·적정성 원칙 도입
 - * 소비자 피해 우려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명령 등
 - (사후구제 강화) 소송 분쟁 절차 합리적 개선*
 - * 소액사건(2천만원 이하)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소송 금지
- ② (추진현황) 규개위 심사 완료(9.26) 후 법제처 심사 중
- ③ (향후계획) 12월 중 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」 국회제출 예정

Ⅲ. 기타 주요현안

1. 가계부채 관리강화

- 지난 8.25일 발표한 ‘가계부채 관리방안’의 기본틀 내에서
강도 높은 세부 후속조치(대출종류별·업권별 세부관리방안) 시행
 - ❶ (개별주담대)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, 예년대비 증가 속도 둔화*
 - * 은행권 개별 주담대 증감액(조원) : (15.상) 34.2 → (16.상) 12.0(22.2↓)
 - 제2금융권은 업권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상환능력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·시행(연내 마련)
 - ❷ (집단대출) 증도금 보증한도 및 건수 제한 등은 기실시중(10.1~)
 - 공적보증기관(주택금융공사, HUG) 부분보증제도(100→90%) 도입, 1인당 보증건수 축소(각 기관 2건 → 통합 2건)
 - ❸ (기타대출) 최근 증가세가 빠른 신용대출, 제2금융권 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중
 -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(DSR)을 연내 조기 구축하고, 필요시 신용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추가 대책 강구
 - 비주담대 LTV 강화방안(담보인정한도 및 가산항목 등 축소)* 마련 (10.7일, 상호금융협의회) ⇒ 10.31일 시행 예정
 - * 담보인정한도 50~80%→40~70%, 가산항목 조정 및 가산폭 5%p로 축소
-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 강화
 - 금융위·원 합동 ‘가계부채 특별 TF’ 가동중(주 1회 이상)
 -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점검
 -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(관리실태 및 규정준수 여부) 실시
 -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,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적기 대응
 - 다만, 인위적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전반에 부작용 발생 우려 ⇒ 균형있는 정책 대응 추진

참 고

상호금융 비주담대 LTV기준 강화

※ 10.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시 결정

-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조정
 - LTV 총한도(기본비율+가산비율)를 종전 80%에서 70%로 조정
 - 기본비율 최저한도를 종전 50%에서 40%로 조정
 - 가산비율한도를 종전 10%p에서 5%p로 조정
- 기본비율 산정방식 합리화
 - (평균 경락가율 산정)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경락 건수가 기준(10건)에 미달시 산정기간의 확대(1년→ 최대 3년)는 가능하나 상위 행정구역*의 평균 경락가율 사용은 불가
 - * 서울·광역시·도·전국지역의 평균 경락가율
 - (조정요건) 기본비율 조정*은 평균 경락가율이 직전 대비 10%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인정
 - * 조정비율은 5%p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(차감은 제한 없음)
 - (산출주기) 기본비율 산출주기를 종전 최소 연간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
- 가산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: 가산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요인, 분할상환요인, 담보물개별특성요인의 세부요건 변경
 - ① 신용요인은 CB 5등급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가산을 허용
 - ② 분할상환요인은 분할상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산을 허용
 - ③ 담보물개별특성요인은 저층, 중심상업지역 등 임대 및 환가성이 높은 경우만 가산을 허용

⇒ 행정지도 예고(9.28.~10.18.)를 거쳐 10.31일 시행 예정

2. 한미약품,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

< 조사경과 >

□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의 불공정거래(미공개정보이용) 가능성과 관련하여

① 9.30(금)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주식과 관련한 공시 및 거래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가 즉시 기초조사 착수

※ 일부 보도와 같이 제보에 의해 조사 개시가 결정된 것은 아님

②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.2(일) 조사에 착수(조사 착수방침 대외발표)하여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휴대전화, 이메일, 공시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중

③ 아울러, 조사개시 이후 의심계좌 등의 거래, 매매 양태 등에 대한 분석 및 카톡내용 등의 제보도 검토

※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받은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한 후,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

< 향후계획 >

□ 한미약품 사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

□ 특히, 금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

○ 다만,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

3.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정착

< 파업경과 >

□ 9.23일, 은행 전 직원의 약 15%(1.8만명), 4대 은행은 약 3% 수준 파업 참가 → 모든 은행의 전산 시스템 및 영업점은 정상적 가동
○ 은행들은 무노동·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, 파업 참가실적을 성과지표(KPI)에 미반영한다는 입장 표명

➡ 금융노조가 11월 예고한 2차 파업도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,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합리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촉구

<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>

□ 저금리 시대의 도래,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인 상황

□ 현재의 연공서열, 획일적 평가,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뒤쳐진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음

➡ 정부는 흔들림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下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

< 성과연봉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>

①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연계?

→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에게 성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별개의 제도

② 단기실적 증시 풍조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팀워크 훼손?

→ 이는 성과평가의 문제이지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공정·객관·투명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해소 가능

※ 10월 중순(10.19일, 잠정), 제5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정착 상황을 점검할 예정

4. 우리은행 민영화

< 추진 현황 >

-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(8.22일) 이후 매각공고(8.24) 및 투자자의향서(LOI) 접수(9.23) 등 매각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중

- 국내·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투자자의향서(LOI)를 제출

* 총 18개 투자자로부터 82%(2.7배)~119%(4배) 수준 투자자의향서 접수

(평가) 당초 기대수준 이상의 투자자 참여는 우리은행의 투자매력과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한 것

→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자율경영 보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, 당초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

-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본입찰(11.11일)이 완료되어야만 판단 가능

< 매각 추진 계획 >

- (실사·면담) 9.30~10.26일 실사기간 중 충분한 재무자료 제공, 투자자별 전담요원(RM) 매칭 등으로 실사에 적극 협조

- 실사기간 중 ①투자자-경영진 면담, ②투자자-정부 면담 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질문·건의에 대해 성실히 대응

- (입찰·낙찰) 11.11(금) 17시 입찰 마감, 11.14(월) 낙찰자 선정

* 낙찰방법의 기본사항은 입찰안내서에 배포, 세부방법은 입찰前 공자위에서 결정

- (매각 종료) 금융위 승인(필요시), 대금 납입 및 주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매각절차 완료